

2024년도 주요업무보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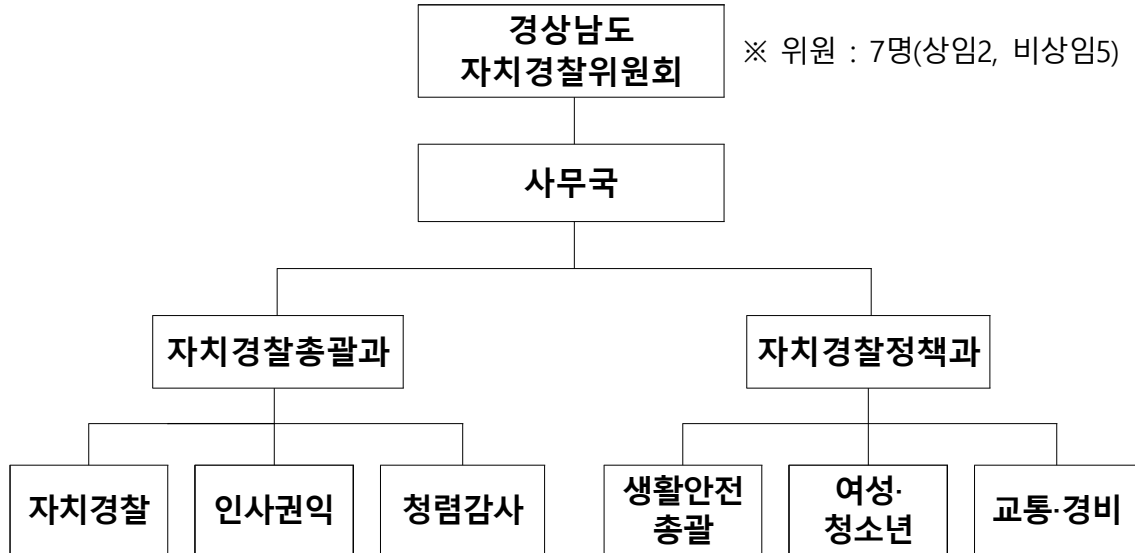
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

목 차

I . 기본현황	1
II . 2024년도 운영방향	3
III .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	5
① 자치경찰총괄과	7
② 자치경찰정책과	13
③ 현안사항	19

I. 기본 현황

□ 기 구 (1국, 2과, 6담당)



□ 인 원 (정원 27 / 현원 29)

(단위 : 명, '24. 1월 기준)

구 분		계	정무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총경	경정	경감	경위	경사
합 계	정원	27	2	1	4	8	7	-	2	1	1	-	1	-
	현원	29	2	1	4	5 (△3)	5 (△2)	2	3	1	2	1	1	2
자치경찰 총괄과	정원	15	2	1	2	5	3	-	2	-	-	-	-	-
	현원	16	2	1	2	3	2	1	1	-	1	1	-	2
자치경찰 정책과	정원	12	-	-	2	3	4	-	-	1	1	-	1	-
	현원	13	-	-	2	2	3	1	2	1	1	-	1	-

※ 도청 공무원(정원 24명 / 현원 22명), 경찰공무원(정원 3명 / 현원 7명), 시간제임기제 2명(정원 외)

□ 예 산

(단위 : 백만원, 당초예산 기준)

구 분	2023년	2024년	증 감	비 고
합 계	14,001	14,968	967	6.9%
자 치 경 찰 총 괄 과	3,384	3,451	67	2.0%
자 치 경 찰 정 책 과	10,617	11,517	900	8.5%

□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

부 서	주 요 업 무
자치경찰 총 괄 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계획(목표) 수립 ·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(연간) 수립 · 위원회 개최 및 운영, 위원회 의안관리 및 검토·분석 ·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관리 · 자치경찰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· 자치경찰제도 홍보 및 행사에 관한 기획·조정 ·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사무국장 원탁회의 관리 ·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·평가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권 위임 협의 및 방침 수립 · 경남경찰청장 임용 관련 자치경찰위원회-경찰청장 협의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·포상 ·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 및 징계 요구 ·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 업무 · 인권침해,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·제도·정책·관행 등의 개선
자치경찰 정 책 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치경찰사무 주요 시책 기획 및 추진 총괄 · 도민 밀착형 경찰정책(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·경비 분야) 수립·추진 ·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시책 수립 및 시행 · 주민참여형 치안정책 수립 및 시행 ·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·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행정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·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중요 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 ·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수립 및 편성 · 자치경찰사무 관련 회계 지출 및 결산 · 자치경찰사무 관련 장비, 물품의 수급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·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 · 국가-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·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 ·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타기관 협력·연계 ·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· 그밖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관련 협의·조정

Ⅱ. 2024년도 운영방향

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실현



6대 정책과제

- ①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 기반의 자치경찰제 운용
- ②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임용권 강화 및 권익향상
- ③ 예방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
- ④ 도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치안환경 조성
- ⑤ 여성·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 활동
- ⑥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
Ⅲ.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

- ☐ 자치경찰총괄과 7
- ☐ 자치경찰정책과 13
- ☐ 현안사항 19

자 치 경 찰 총 괄 과

1.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 기반의 자치경찰제 운용
2.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임용권 강화 및 권익향상
3. 예방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

1

도민과 소통하는 참여 기반의 자치경찰제 운용

- ❖ 도민 홍보 및 도민 정책자문 활성화로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
- ❖ 자치경찰위원회 지휘·감독 기능 실질화로 자치경찰 확립

□ 추진방향

- 도민 참여·홍보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제 인식 개선 및 체감도 향상
-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·감독 강화를 통한 자경위 기능 실질화

□ 추진계획

- 도민 밀착형 자치경찰사무 추진 및 성과 공유
 - 자치경찰대상(大賞)* 시상으로 우수 성과 공유 및 현장 경찰관 동기 부여
* 제3회 자치경찰대상 개최 자치경찰 시책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('24. 10.)
 -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기능 활성화로 정책만족도 제고
 - 제1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활동·성과 백서 발간
- 적극적인 도민 소통과 홍보를 통한 치안 만족도 제고
 - 「경상남도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」 활용 홍보 강화
 - 시·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 강화
 - 정책 제안 및 치안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창구* 운영
*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제안, 경찰공무원 고충상담, 민원신청 등 소통 코너 상시 운영
 - 홈페이지, 유튜브 및 SNS 등 활용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·배포
- 실질적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지속
 - 자치경찰사무 관련 상시 보고체계 확립(경남도경찰청→자치경찰위원회) 및 선제적 정책방향 설정에 따른 조치 지시 등으로 지휘·감독권 강화
 -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정원 현실화 지속 건의(행안부, 경찰청, 인사혁신처 등)

□ 기대효과

- 현장 중심 제도 운용 및 홍보 활성화로 제도 성과 체감도 향상
-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지속으로 자치경찰제 발전 도모

2

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임용권 강화 및 권익향상

- ❖ 분권과 전문성이 반영된 인사시스템 운영
- ❖ 실질적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치안현장 체감도 제고

□ 추진방향

- 자치경찰사무 전문성 확보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임용권 행사
- 체계적인 복지·처우 개선으로 우수 경찰인력 확보

□ 추진계획

- 경찰청·경남도경찰청·서별 인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 인사 운영
 - 임용 대상자 추천 전 인사협의 및 대상자 검증 강화
 - 지구대·파출소장 보직 시 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
- 자치경찰사무 담당·수행 공무원 체감형 후생복지 지원
 -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
 - ※ 종합건강검진 30만원(2,400명), 복지포인트 30만원(1,100명)
 - 찾아가는 후생복지 설명회를 통한 등 적극적인 현장 의견 반영
- 자치경찰제 전문성 향상 및 포상 실시
 - 직무전문교육 운영으로 자치경찰제 정착 및 전문성 향상
 - 치안현장 업무 유공자 발굴 시상으로 사기진작 제고
-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
 -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
 -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구대·파출소 임용권 확대 요구

□ 기대효과

-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행정 전문 경찰인력 확보 및 지원
- 자치경찰의 사기진작을 통한 자율적·창의적 치안활동 수행

- ❖ 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·관행 개선 등 공감받는 감사체계 이행
- ❖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개선책 추진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상 확립

□ 추진방향

- 자치경찰사무 관련 관행적·소극적 행태와 취약 요소에 대한 책임감사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도모
-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치경찰상 정립을 위한 도민 공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 강화

□ 추진계획

- 현장 중심 감사와 적극행정 유도로 공감받는 감사활동 전개
 -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현장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
 - 감사직무 전문성 함양을 통한 감사 효율화 제고
 -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감경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유도
 -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 배포, 직무교육 실시
- 참여-소통-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반부패·청렴도 향상
 - (참여) 청렴 슬로건 공모전,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 사례발굴 등
 - (소통) 청렴 소통간담회, 청렴·인권보호 소식지 제작·배부 등
 - (협업)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경찰청과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

□ 기대효과

- 예방 중심 감사 및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
- 올바른 공직관 조성 and 일탈행위 경각심 제고로 청렴 인식 확립

자 치 경 찰 정 책 과

1. 도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치안환경 조성
2. 여성·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 활동
3.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

- ❖ 도민참여 및 지방행정-경찰행정 연계로 경남형 자치경찰정책 추진
- ❖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생활안전 확보

□ 추진방향

- 행정과 경찰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
- 주민 소통창구 확보로 도민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치안정책 추진

□ 추진계획

- 도민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종합대책 수립·추진
 - 도·경찰교육청 합동 「경상남도 사회적 폭력 대응 종합대책*」 본격 추진
 - * 이상동기 범죄, 스토킹 범죄, 학교폭력 등 5대 추진과제 및 협력과제
 - 「경상남도 5대범죄 예방대책 연구」 용역 결과 토대 맞춤형 방법대책 수립
-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협력방법 활동 강화
 - CPO 연계 순찰활동 수행 「우리동네안심순찰대」 전 군 확대 운영(300백만원)
 -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및 피복비 신규 지원(1,117백만원)
-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치안인프라 확대
 - 민선 8기 도정과제 「범죄예방 환경설계(셉테드) 확대*」 추진
 - * 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한 길 조성 및 주민참여형 셉테드 기법 도입 환경 정비
 - 범죄예방시설 구축 「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」 확대(집중 200백만원 개별 208백만원)
-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도 및 시군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
 - 자치경찰사무 협력 강화를 위한 「실무협의회」 운영(분기 1회)
 - 「시·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*」 활성화(반기 1회, 수시)
 - * 시·군,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기관 및 주민참여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환경 조성
 - 시·군별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독려·지원

□ 기대효과

-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·협력으로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
- 도민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도민안전도 제고

- ❖ 여성·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
- ❖ 학교폭력, 아동학대, 실종예방 등을 위한 협업 활성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

□ 추진방향

- 사회적약자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추진
- 학교폭력, 아동학대, 실종예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업 활성화

□ 추진계획

- 스토킹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신변보호사업 지속 추진
 - 전년도 스토킹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한 신변보호결과, 대상자의 신변 보호, 범죄불안감 해소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 회복에 큰 효과 발휘
 - 금년도는 스마트와치 및 임시숙소를 적극 제공하고,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적극 신청(수사기관 → 법원)
-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지원
 - 학교 주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
 -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SPO(학교전담경찰관) 증원(75명 → 83명(증8))
 - * 소통·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실무협의회 운영(분기 1회, 수시)
 - 청소년 경찰학교(3개서) 운영으로 폭력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변화
 - * 학교폭력·소년범죄 예방교육 강화 및 학교폭력 VR(가상현실) 체험 콘텐츠 활용
 -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추진
-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* 운영
 - 은폐·반복·순환되는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 운영
 - * 통합솔루션팀: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·법률·상담·생활 지원 등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

□ 기대효과

-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등 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
- 사전 예방 활동과 가해자 선도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여

- ❖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 체계 마련
- ❖交通安全 관련 기관별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성 한계 극복

□ 추진방향

- 交通安全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한 보행자交通安全 체계 구축
- 도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다각적 안전대책 마련

□ 추진계획

- 시설개선 및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통한 보행자交通安全 확보
 -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 분석과 유관기관* 협업으로 횡단보도 안전 공동 대책 마련
 - * 경남경찰청, 道교통정책과, 도로교통공단 등 도내 교통유관기관
 - 데이터 기반 「지역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*」 추진(140백만원)
 - * 지역에 따라, 바닥형LED보행신호등(인구30만 시) 또는 무단횡단 방지펜스(그 외 시군) 설치
 - 교통법규 위반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* 추진(601백만원)
 - * 상습 과속구간 등 사고 우려 지역에 과속·다기능·구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
- 교통약자(어린이·노인) 맞춤형交通安全 대책 실시
 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·단속 강화
 - 노인보호구역 전 시·군 확대 및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송출*
 - * 내비게이션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·신규 노인보호구역 음성안내 실시
-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
 -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·플래카드 등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(189백만원)
 - 맞춤형交通安全 교육, 유관기관 합동 홍보 등을 통한 효과 극대화

□ 기대효과

-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
-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한 보행자交通安全 향상

현안사항

1. 「제2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」 위원 구성 계획
2.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

1

「제2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」 위원 구성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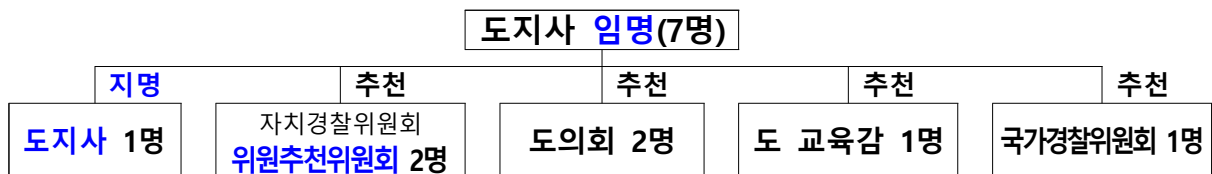
❖ 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 만료('24. 5. 9.)에 따른 제2기 위원 구성

□ 추진방향

- 지역치안행정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
- 다각적인 치안행정 실현을 위한 여성,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임명

□ 구성계획

- (근 거) 「경찰법」, 「자치경찰 규정」, 「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조례」
- (구 성) 위원 7명(상임위원 2명, 비상임위원 5명)
 - 위원장(도지사 임명), 사무국장(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 임명)



<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>

- ▶ (임명) 시·도지사 ※ 위원추천시 한시적 구성·운영
- ▶ (구성) ① 시장·군수 협의체 추천 1명 ② 시·군의장단 협의체 추천 1명
- ③ 경찰청장 추천 1명 ※ 현직 경찰공무원 제외
- ④ 경남경찰청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추천 1명 ⑤ 도 기획조정실장(당연직 위원)

※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

- (임 기) 3년('24. 5. 10. ~ '27. 5. 9.), 연임불가

※ 보궐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- (기 능)

-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, 시책 수립
-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·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

□ 추진계획

-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 계획 수립 : '24. 1월 중
- 위원 지명 및 추천 접수 : '24. 3월 중순
- 추천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: '24. 3월 말
- 제2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 : '24. 5. 10.(금)

「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- ❖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 위한 조례 개정
- ❖ 법령에 근거한 회의 및 자문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업무 수행

□ 관련법령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* 제13조 제5항(원격영상회의등 운영) * **대통령령**

□ 개정내용

- **대통령령** 일부 개정사항 도 조례에 반영
 - 「서면회의 및 원격영상회의 포함한 회의 운영」 조항을 신설
- 정책자문을 위해 운영 중인 「정책자문단」 설치 근거 마련
 - 정책추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 조항 신설

□ 추진계획

- 입법예고 등 사전 입법절차 이행 : '24. 1월 초
-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'24. 2월 중
- 도의회 의안 제출 및 심의 : '24. 3월 중
- 조례 공포 및 시행 : '24. 4월 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의안의 발의 및 상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 서면·원격영상회의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 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 정책자문단 설치</p>	<p>제9조의2(정책자문단의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정책자문단의 위원에게는 「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, 회의 개최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</p>